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9.13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, 금융·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.
-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,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.
 - 이제부터라도 재정 씹씹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.
 -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입니다.
-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.30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'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, 이번에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[❶ 재정준칙 도입방안]

- 먼저,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·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.
 - 현재 재정준칙은 전세계 105개국에서 도입중이며,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

- 그동안 정부 뿐만 아니라 여·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, 재정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.
-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.

□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하였습니다.

- ① 먼저,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*으로 설정하고,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%로 설정하되,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%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.

* 통합수지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흑자로 다소 양호해 보이는 착시효과有

- ② 다만, 전쟁·재난·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,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③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,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.

□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되어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-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[②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]

□ 다음으로,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.

□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*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,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,

* ('13~'17.5) 94개 사업, 25.0조원 → ('17.6~'22.4) 149개 사업, 120.1조원

○ 다른 한편에서는, 경제·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,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'재정의 문지기'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, 예타의 신속·유연·투명성도 높이하고자 합니다.

① 우선,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,

-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*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

* (현행) 국가정책적 필요사업 → (확대) 공공청사, 법령상 추진사업까지 확대

②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,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.

③ 또한,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, 4개월을 단축하겠습니다.

- ④ 경제·재정규모 확대*에도 불구하고, '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오던 SOC·R&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,

* GDP : ('99) 591 → ('21) 2,072조원 (3.5배), 총지출 : ('99) 145 → ('21) 558조원 (3.8배)

- 500억 내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.

- ⑤ 아울러, 국민들께 지역·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.

□ 예타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.

□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입니다.

□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,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